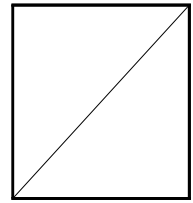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2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1. 26. (임시 제1차)	

대한전선(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재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도 규 상
제출 연월일	2021. 1. 26.

1. 의결주문

대한전선(주)의 제57기('11.1.1. ~ '11.12.31.)부터 제58기('12.1.1. ~ '12.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재조치안 및 직권재심안을 별지1 내지 별지3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법원이 대한전선(주)의 제57기('11.1.1. ~ '11.12.31.)부터 제58기('12.1.1. ~ '12.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14.12.3. 증선위, '14.12.24. 금융위) 중 일부의 취소 판결을 함에 따라
 - 판결로 인정된 지적사항만을 근거로 대한전선(주), OO회계법인 등에 대하여 재조치하고, 대한전선(주)에 대한 '14년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14.12.3.)의 조사·감리결과 OOO(회사 前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대한전선(주)에 대한 재조치 및 직권재심안

지적 사항	○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12년 별도: 211,470백만원, ‘12년 연결: 214,717백만원)
조치 내용 *1,*2,*3	○ 증권발행제한 12월*4 ○ 과징금(前 대표이사 OOO 16백만원) 직권 취소*5

*1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수준이 ‘현행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수준과 동일하여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을 적용

*2 동기판단 : '14년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14.12.3.)에 회사의 위법동기를 ‘중과실’로 판단하여 조치안을 상정하였으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관련 위법동기를 ‘고의’로 수정하여 의결

–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의결 내용 :

회사가 대한시스템즈와의 SCR* 거래(회사가 대한시스템즈에 SCR을 공급하면 대한시스템즈가 이를 거래처에 재판매하는 형식의 거래)를 통해 신용공여에 대한 채권은행의 사전승인 조건을 우회하여 대한시스템즈에 자금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고,

* Southwire Continuous Rod, 전력선에 들어가는 구리선을 만드는 기본소재

회사는 대한시스템즈가 판매대금을 회수한 후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사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며, 자금관리단이 승인하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결제조건을 감사인에게 자금관리단이 승인한 사항이라고 알려주는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회사의 동기판단을 고의로 수정하여 조치하기로 함

*3 가중·감경 : 최종 1단계 가중

– 가중사유 :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날('12.5.9.)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하였고, 위법행위를 반영하여 재무제표 정정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전환

– 감경사유 : 없음

*4 '12년 사업보고서 거짓기재와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3년, '16.4.1.)이 경과하여 현 시점에서 과징금 조치는 할 수 없으나, '12년 재무제표 회계기준 위반행위가 '고의 가중시 최대'에 해당하여 舊 「외감법」 및 「양정기준」에 의한 '증권발행제한 12월' 조치 부과

*5 회사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내용을 고려하여 행정소송 미제기로 취소되지 않은 ООО(회사 前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16백만원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1호에 근거하여 직권 취소

나. ООО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ООО에 대한 재조치안

지적 사항	○ 매출채권 등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년 연결 및 별도: 211,470백만원)
조치 내용 *1,*2,*3	<input type="checkbox"/> ООО회계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70%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ООО(주책임자, 담당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정지건의 1년^{*4} ○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4년^{*4}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4} ○ 직무연수 16시간^{*4}

- *1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수준이 ‘현행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수준과 동일하여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을 적용
- *2 동기판단: 감사인은 대한시스템즈(채무자)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차입조건이 완화되는 등 채무자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여 관련 채권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지만,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해 전문가적인 의구심 없이 단지 형식적인 감사절차만을 수행함으로써 동 자료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을 근거로 ‘12년말 채권을 전액 회수한다고 해도 채권잔액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어 있고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중요하게 누락된 부분이 존재하는 등 회사가 제시한 회수가능액 추정자료의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실’로 판단
-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 : 없음
 - 가중사유 : 없음
 - 감경사유 : 없음
- *4 직무정지(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15년~’18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1년), 직무연수(16시간) 조치가 이미 집행 완료되었으나, 위법행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원조치가 법원판결로 모두 취소되었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 재조치하는 것이며, 추가 집행은 불필요

4. 참고사항

가. 제14차 감리위원회 심의필(2020.12.10.)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별지1)

대한전선(주)에 대한 재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한전선(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조치한다.

- 다 음 -

1. 재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대한전선(주)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 000 000 0000 000 0000

2. 재조치내용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의하여

- 대한전선(주)에 증권발행*제한 10월을 부과한다.

*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증권, 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3. 재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대한전선(주)(이하 '회사')는 제58기(2012.1.1.~2012.12.31.)의 연결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는 제58기(2012.1.1.~2012.12.31.)의 연결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함에 있어,

대한시스템즈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대한시스템즈가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할 만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회사 채권에 대한 상환자금을 다른 용도(차입금 상환)로 전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회수가능액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여 아래와 같이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각각 과대(과소)계상

- 아 래 -

(단위 : 백만원)

구 분	별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2012	2012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211,470	214,717
당기순이익 (과소)계상	(15,528)	(12,281)
자기자본 과대계상	211,470	214,717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10호,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상기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정을 요하는 사건)인 경우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여야 하며,
- 매 보고기간말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함

(별지2)

OOO(대한전선(주) 前 대표이사) 과징금 부과처분 직권 취소안

증권선물위원회는 2014년 22차 증권선물위원회('14.12.3.)의 대한전선(주)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OOO(대한전선(주) 前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16백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다 음 -

1.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대상자의 인적사항

☐ OOO

○ 주소 : 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OO

2.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내용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1호에 의하여

○ 2014년 22차 증권선물위원회('14.12.3.)의 대한전선(주)(이하 '회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중 OOO(대한전선(주) 前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16백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과징금 부과처분 직권재심이유

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이유

☐ 법원은 회사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회사의 '11년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인정되지 않고, '12년 회계처리기준 위반만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 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함(서울고등법원 '20. 7. 22. 선고 2019누37020 판결)

☐ OOO(회사의 前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한 지적사항(증권신고서 거짓 기재('12.9.25.))이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아

- ○○○(회사의 前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근거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동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2014년 22차 증권선물위원회('14.12.3.)의 회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중 ○○○(회사의 前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16백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함

나. 근거법규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1호

-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직권으로 다시 심의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별지3)

OO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한 재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OO 회계법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조치한다.

- 다 음 -

1. 재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OO회계법인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9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000 0000 000000 00 0000000000 00

☐ 공인회계사 000 (제58기 주책임자, 담당 이사)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0
- 주소 : 000000 000 0000000 00000000 000 0000

2. 재조치내용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 OO회계법인은 대한전선(주)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2012회계연도 감사보수액의 70%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추가 적립하여야 하고,
- 2021회계연도부터 2023회계연도(2021.1.1.~2023.12.31.)까지 대한전선(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70% 조치는 기납부한 경우 추가납부는 필요하지 않음
위법행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원조치가 법원판결로 모두 취소되었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 재조치하는 것임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 공인회계사 000에게 직무정지 1년의 처분을 명하여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
- 공인회계사 000는 조치서를 받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 2015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2015.1.1.~2018.12.31.)까지 대한전선(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16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직무정지(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15년~'18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1년), 직무연수(16시간) 조치가 이미 집행 완료되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원조치가 법원판결로 모두 취소되었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 재조치하는 것이며, 추가 집행은 불필요

3. 재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00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대한전선(주)(이하 '회사')의 제58기(2012.1.1.~2012.12.31.)의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舊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함

○ 매출채권 등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소홀

- 감사인은 제58기(2012.1.1.~2012.12.31.)의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12년 회계감사 수행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유채권 대손충당금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의 회수가능액 평가결과 및 그 절차를 검증하였으나 회수가능액 평가에 사용된 미래추정현금흐름 등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감사절차만을 수행하는 등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과대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12년 211,470백만원)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아니함

나. 근거법규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舊「회계감사기준」 200, 500, 540 및 560

- 상기 규정에 의하면,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 하여야 하고,
-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의 수정이나 공시를 필요로 하는 사건을 모두 파악하였는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 수행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을 알게 된 경우 동 사건이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계상되고 공시되었는지 고려하여야 함

(붙임)

관계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제5조 (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생략)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제15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② (생략)

③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16조 (감사인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4.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 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략)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5. (생략)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2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4. 생략

② (생략)

제7조의2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① 법 제13조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7. (생략)

② (생략)

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 위임 등)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권한
 2. 품질관리감리업무 중 감사인의 감사수행 현황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업무
 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회사·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권 중 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자료 제출요구권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감사업무의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권한
- ⑥ 공인회계사회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감리업무의 처리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감리결과등의 처리) ① 증선위위원장은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등 법 위반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영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에의 처분건의
 - 가. 등록취소
 - 나. 2년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
2.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가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당해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담당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감사반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조치의 수준,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조치기준) 증선위가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크기 등 중요도, 고의성의 유무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조치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때에는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 (조치의 가감 및 병과등) ④ 증선위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질적 특성, 고의성의 유무, 과실의 정도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67조(감리업무의 위탁) ① 영 제9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라 함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를 말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
2. 증선위위원장이 감독원의 감리가 필요하여 위탁대상에서 제외함을 공인회계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한 회사(감독원의 감리대상기간에 한한다)

제75조(권한의 위탁) ①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7. 제51조에 따른 조사업무 집행
8. 제59조제2항에 따른 감리결과 위반 및 조치내용의 관련기관 통보
9. 제64조에 따른 감리결과 및 품질관리감리결과와 사후관리 집행
10.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 업무 및 의견제출접수
11. 제76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회 감리결과 보고수리 및 조치안 작성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인회계사회 관련 자료요청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증권선물위원회의 직권재심)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다시 심의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증거문서의 오류·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15.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에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문단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
보고기간후사건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 (1)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 (2)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문단5. 재무제표를 발행한 이후에 주주에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주주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발행한 날이다.

문단8.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한다.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

적용사례 문단21. 기업이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의 결정

문단8에서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에 해당하지만 대리인인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수익이 아니다. 대신에 이 경우 수익은 수수료 금액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기업이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사실과 상황을 판단하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된다면 기업은 본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기업이 본인으로 호라동하는 것을 제시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기업은 고객에 대한 재화나 용역 제공이나 주문의 이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주문하거나 구매한 재화나 용역을 수락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 (2) 고객이 주문하기 전후나 인도 중에 또는 반환 시점에 기업이 재고위험을 부담한다.
- (3) 기업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 추가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격결정 권한을 갖는다.
- (4)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에 대하여 고객의 신용위험을 부담한다.

기업이 재화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지 않으면 기업은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기업이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한 가지 특성은 거래 당 고정된 수수료 또는 고객에게 청구된 금액의 특정 비율로 기업이 가득하는 금액이 미리 결정된다는 것이다.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문단58.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지를 매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거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은 각각 문단 63,66 및 67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문단59.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이며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이다. 손상을 초래한 단일의 특정 사건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 사건의 복합적인 결과가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아무리 발생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되었다는 증거에는 당해 금융자산 보유자의 주의를 끄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자료가 포함된다.

- (1) 금융자산의 발생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2)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3)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 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4)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 (5)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이러한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가)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예를 들면, 연체횟수가 증가하거나, 신용한도에 도달하고 매월 최소금액을 상환하는 신용카드 차입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 (나)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예: 차입자 거주 지역의 실업률 증가, 관련 지역의 담보 자산가격 하락, 석유생산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의 경우 석유가격의 하락, 차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상황의 악화 등)

문단62.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제한적이거나 현재의 상황에 더 이상 충분히 목적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차입자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유사한 차입자에 관한 이용가능한 과거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경험적 판단에 따라 손상차손을 추정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할 목적으로 금융자산의 집합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를 조정하는 데 기업의 경험적 판단을 사용한다(부록 A의 문단 AG89 참조). 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제표작성의 필수적 요소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아니한다.

문단63.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한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 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64.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한다(문단 59 참조).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의 유의성에 관계없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한다.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기존 손상차손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집합적인 손상검토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단AG84.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이유는 현행 시장이자율로 할인하면 상각후원가로 측정해야 하는 금융자산을 실질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여금, 수취채권 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조건이 재협상되거나 차입자나 발행자의 재무적 어려움 때문에 수정된다면, 손상차손은 조건변경 전의 최초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으면, 단기채권과 관련된 현금흐름은 할인하지 아니한다. 대여금, 수취채권 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이 변동이자율

조건이라면, 문단63에 따라 손상차손을 측정하는 데 적용할 할인율은 계약에 의해 결정된 현행 유효이자율이다. 실무편의상 채권자는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측정할 수 있다. 담보부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담보물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담보물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에서 담보물의 획득 및 매각 부대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문단AG86. 손상차손은 단일 금액이나 일정 범위의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손상차손을 일정 범위의 금액으로 추정하는 경우 손상차손은 그 범위 내의 금액 중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한다. 이때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하여 재무제표가 발행되기 전에 이용가능한 모든 관련정보를 고려한다.

□ 舊 「회계감사기준」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2.3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500 감사증거

1.2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540 회계추정치(accounting estimates)에 대한 감사

2. (감사증거) 감사인은 회계추정치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3.1 감사인은 회계추정치가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적절하게 공시되었는지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3.2 회계추정치를 감사함에 있어서 감사인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경영자의 추정절차에 대한 검토 및 시사
- (2) 경영자의 추정치와 독립적인 추정치와 비교
- (3)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을 검토하여 회계추정치의 타당성을 확인

4. (감사절차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감사인은 회계추정치가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감사인이 이해하고 있는 바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또한 감사과정에서 수집한 타감사증거와 모순이 없는지 최종적 평가를 하여야 한다.

600 타감사인의 감사결과 활용

3. (주감사인의 감사절차)

3.2 감사인은 타 감사인이 수행한 업무가 감사인의 감사목적에 적절한지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사인간 협조) 타감사인은 감사인이 그 감사결과를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감사인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회계감사지침 600. 4. (감사인간 협조) 타감사인은 감사인의 요청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이를 감사인에게 알린다. 법적 또는 전문가적 고려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감사인도 타감사인의 감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이러한 사항을 타감사인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기업회계팀	회계심사국
연 락 처	02-2100-2695	02-3145-7730